

2004. 6. 30(수)
제101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에 대한 건의문

제 천 시 의 회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이헌재 총리권한대행님!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바야흐로 21세기 국운융성의 시대를 맞아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총리권한대행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의 제정으로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결로 통과됨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동안 과도한 수도권집중에서 비롯된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제천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모든 주민들은 관련법 제정에 환영함과 아울러 찬사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충청권 이전

은 또 다른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충청권을 배제한 타지역으로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부터 가깝게는 100km, 먼곳은 200km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배제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혜는 커녕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역차별을 당하여 지역 경제의 침체는 물론 지역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15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 신 행정수도 건설입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제천·단양등 충북 북부지역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4. 6. 30

제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